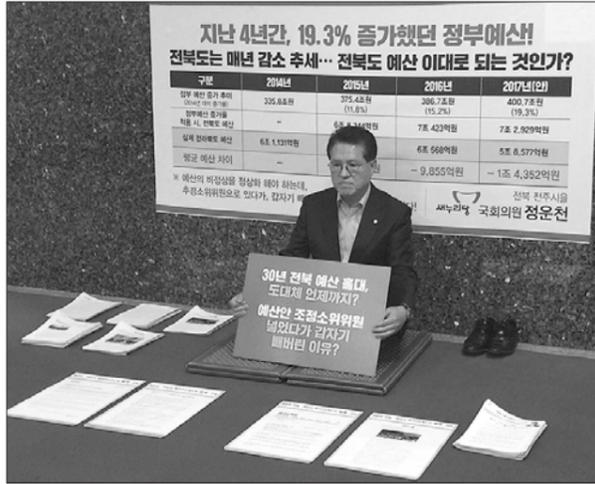


“친박계, 정운천에 정치적 보복”

친박 지도부 퇴진운동 참여
예산안 조정소위서 제외돼
친박 김선동 대신 투입
친박 지도부 정치보복 논란
정운천 의원 1인 시위 나서
전북지역 예산 확대론 주장

숨길 수 없는 새누리당의 본심과 민
낫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전북도민이 힘겹게 선출한 정운천
의원의 예산안 조정소위의 ‘갑작스런’
제외에 대해 도민의 허탈감과 분
노가 들끓고 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은 8
일 국회 본청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
표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정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조정소위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전북 지역 예산 확대
론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
다.
정 의원은 지난 4·13총선에서 전주
를 지역에서 당선된, 이정현 대표와
함께 전북과 전남을 대표하는 둘 밖
에 없는 호남지역 의원이자,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지난 8월 호
남출신 이정현 대표를 내세우며 전북



8일 국회 본청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정운천 의원

인사와 예산을 배려하겠다고 약속했
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당초 호남 묶으
로 정 의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내정했
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 6일
새누리당은 정 의원을 예결소위에서
배제하고, 대표적 친박계 인사인 김
선동 의원을 예결소위에 포함시켰다.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지
난달 31일 친박 지도부 퇴진 성명 운
동에 동참한 정 의원에 대한 친박 지
도부의 정치적 보복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최순실씨의 국정농
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른바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임’ 명단에 이름
을 올리고 이정현 당 지도부 사퇴를
주장했다.

다시 말해 당초 정 의원이 호남 묶
으로 예산조정소위에 내정됐으나,
정 의원이 친박 지도부 퇴진 운동에
참여하자, 친박 지도부가 정 의원에
게 불이익을 줬다는 얘기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안 조정소위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문을 알지도 못한
채 갑자기 배제됐다”면서 “남 지도부
가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에 넣었다가
갑자기 빼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
할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 의원은 특히 지난 4년간 정부예
산이 19.3% 증가한 데 반해 전북 지
역 예산은 매년 감소 추세라는 주장
을 펴고 있다.
정 의원은 “전북도민이 정운천을 뽑
아준 건 꼭 막힌 중앙에 예산통로를
열어 지난 30년간 홀대받은 전북예산
을 제대로 챙기려는 준엄한 명령이었
다”며 “갑작스럽게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에서 배제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행동으로 전북도민의 뜻을
전달 할 것”이라고 1인 시위에 돌입
한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분노도 가라앉
질 않고 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정 의
원이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제외
된 것은 친박계 지도부 퇴진 성명에
동참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
고 비판했다. /고민형 기자



지방발전 비전과 공직자의 역할 8일 전북혁신도시 지방행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5회 열린강좌에 송하진 도지사가 초빙강사로 참석해 '지방발전 비전과 공직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정읍시의회, 박근혜정부 규탄 시국선언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8일 의
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정읍시
의회관 앞에서 민주주의 기초를 무너
뜨리고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하여 강력한 규탄대회를 실
시하였다.
의회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최순실과 그의 측근 배후세력
에게 위탁하여 국기를 문란케 하였으
며, 동학농민혁명, 4.19혁명, 광주민주
항쟁 정신으로 이어져 내려온 민주주
의 기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방
정부의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최순실과 그의 측근들의 비리

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묵인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저지른 일이었
다. 이처럼 국민들을 농락하고 국기
를 문란케한 대통령이 국민들을 두려
워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17명 일동은
최순실의 폭두각시 노릇으로 국정을
파탄케 하고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박
근혜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또한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고 정
부를 파탄으로 만들어낸 박 대통령은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읍=립대환 기자

전북도, 소방 안전 책짐에 총력 기울인다

인력 충원 · 조직 개편 · 장비 노후 제로화 추진 · 노후 청사 현대화 등 추진

전북도가 도내 소방인력과 장비를
충원키로 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인력 보강을 위해 소방 현장
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방차량
과 장비 노후 제로화를 추진 중이다.
도는 소방차량 보강에 135억원을 투
입해 73대를 구입했고 올해 108억원
을 투자해 65대를 구입 예정이다.
이에 지난해 장비 노후율 약 25%에
서 현재 약 4%로 감소했다.
도는 내년도도 약 98억원 투자, 54
대를 보강해 노후율 0%를 달성할 계
획이다.
소방 대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개
인보호장비 보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도는 올해 약 24억원을 투자해 노후
장비 5,191점을 교체해 개인 보호장비
의 노후율은 약 14%에서 0%로 뚝 떨어

어졌다.
소방서비스 증진을 위한 인력 보강
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신규 소방공무원 128명을
채용해 기존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결원을 보충한 데 이어 이 중 타·시·도
소방공무원 경험자는 곧바로 현장
에 투입하였고, 수요가 많은 구급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고급 자격
구급대원을 우선 투입했다.
또한 내년도 소방 조직개편을 통해
출동이 많은 지역의 119구급대 18개
대, 54명을 보강해 3인 구급대를 운
영, 도민에게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현장조사분석팀을 신설하여 침
단 화재조사 분석차량을 도입해 운영
하고, 재난 현장조사와 원인분석을
강화하는 등 분석을 통한 예방홍보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기관 신설 및 노후 청사 현대화
도 빠지지 않는다.
도내 소방력이 부족하거나 신규 개
발지역 등에 소방기관을 신설하고,
노후 청사를 개선해 소방대원들의 근
무환경이 개선된다.
지난해 전주 서부신시가지 서부119
안전센터 신설과 올해 혁신119안전센
터 신축 등 약 90억 원을 투입해 총 7
개소의 청사 신설 및 신축·이전사업
을 추진 중이며 완주소방서 신설도
계획 중이다.
또한 향후 횡단·도시지역의 재난대
응을 위한 소방정 ‘새민금 119호’를
군산 비응항에 배치키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소방의 안전과 복지
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든든한 안전 지
킴이로서 많은 역할과 활약을 기대한
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도 '수발아' 피해 버 공공비축미곡 가격 매입

전북도가 수발아 피해 버
공공비축미곡 가격 매
입키로 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수발아(이삭
에서 낱알이 싹트는 현상) 피해
벼를 잠정등급의 A(피해립 40%
미만)·B(피해립 60% 미만)로
구분해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가격은 각각 40kg포대당
우선지급금 2만5,510원, 1만7,010
원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
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한다.
도는 농가희망 물량 전량을 매
입할 계획으로, 매입기간은 내
달 31일까지다.
시장거래곡 매입 시에는 잠정
등급의 A·B를 함께 매입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경
리곡 유효물량 5,000톤을 수발아
피해발생 면적 등을 고려, 이달
중 시도에 배정할 예정이다.
/고민형 기자

전북변호사회 '대통령 퇴진 촉구' 선언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비선 실세' 최
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 박
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
고 나섰다.
전북변호사회(회장 황선철)는 8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 대통령은 손
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망
상을 버리고 즉시 사임하라”고 촉구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형식적이고 지엽
적인 수사만 할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
라”고 강조했다.
전북변호회는 “국가원수로서의 자질이
결핍된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번지
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반헌법적이
고 탈법적인 행동으로 국가신인도가
크게 훼손됐고, 주권자인 국민의 실
망과 분노는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뉴시스

이어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진심으
로 사과하고 신뢰할 만한 대안 마련
은 커녕 기존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방식으로 현 시국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듯하
다”며 “주권자인 국민은 박 대통령에
게 사임 외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
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변호회는 또 검찰에게 헌법과 법
률을 침해한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했
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
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지는 헌법에
의해 극히 합당하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주권자
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할 때 지금 국민들의 요구
가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